

 <b>국토교통부</b>		<b>보도참고자료</b>	
		<b>배포일시</b>	<b>2019. 6. 10.(월) / 총 2매(본문2)</b>
<b>담당 부서</b>	건설산업과	<b>담당자</b>	·과장 박정수, 사무관 박정규, 주무관 이종언 ·☎ (044) 201-3538, 3542
<b>보도일시</b>		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

## 공정한 의견수렴 통해 건설현장의 안전 강화를 위한 타워크레인 안전대책을 만들겠습니다.

- 국토교통부(장관 김현미)는 소형 타워크레인에만 한정하지 않고, 일반 타워크레인까지 종합한 “타워크레인 안전대책”을 마련하기 위하여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협의를 추진해 오고 있으며, 앞으로도 소통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.
- 우선, 지난 6월 5일에 양대 노총 타워크레인 조종사 노조와 합의한 노·사·민·정 협의체에는 소형 조종사를 대표하는 단체 등이 없어 소형 조종사와 직접 관련된 사용자 대표(건설사에서 현장직원 소형 타워크레인 교육 이수 지원 등)로서 건설협회를 포함시켰습니다.
  - \* 노·사·민·정 협의체 : 민주노총(건설노조 타워크레인분과), 한국노총(연합노련 한국타워크레인조종사노조), 시민단체(경실련), 사업자(한국타워크레인협동조합), 건설단체(대한건설협회), 국토교통부(건설정책국) 등 총 6명 구성
- 또한, 금번 파업에 미참가한 노조, 소형 조종사, 설·해체 노조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도 충분히 수렴하기 위해 기존 운영해 온 민관 협의체 또는 개별 면담 등을 대책 마련 시까지 지속적으로 이어갈 예정입니다.

- 민관협의체 : 한노(타워분과, 연합노련), 민노, 설해체, 임대사, 검사기관, 수입사, 제작사, 표준협회, 건설협회 등(1차 회의: 3.28, 2차 회의: 4.25)
- 개별 협의 : 한노(타워분과, 4.19, 5.20), 임대업체(4.16), 민노(4.22, 24), 제작사/수입사/표준협회 등(5.13), 교육기관(5.21)

□ 소형 타워크레인 안전 문제는 파업에 참가한 민주노총, 한국노총 (연합노련 한국타워크레인조종사노조) 이외에도 한국노총(타워분과), 소형 임대사업자 등 여러 단체 및 기관에서 민간 협의체 및 개별 면담 과정에서 제기하여 논의되어 온 사항이며, 지난 2차 민관 협의체(4.25)에서 정부가 마련할 ‘소형 타워 크레인에 대한 제도 개선 방향’도 이미 공유했던 사항입니다.

- \* 한국노총(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 타워크레인분과) : 소형 규격 명확화, 소형 조종 자격 강화, 임대료 적정화 등 건설현장 건의사항 지속 제기
- \* 소형 타워 개선방향(4.25, 협의내용) : 규격제한, 조종자격 강화, 안전설비 강화 등

□ 앞으로, 정부는 국제기준, 선진 사례, 기술개발 동향 등을 참고하여 특정 단체의 이해관계에 치우침 없이 **건설현장의 안전 강화**를 위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.

< 관련 보도내용 (뉴스1, 6.9.(일) >

- ◆ 양대노총 고래싸움에 등터진 소형크레인...공급과잉 희색양되나
  - ‘공급과잉’에 싸움 격화...“노·노 경쟁→비노조 밀어내기”
- ◆ 양대노총에 밀려난 ‘비노조’ 소형크레인, 협의체도 빠져
  - 소형 타워크레인 규제 논의에 당사자 없고 양대노총만
  - 전문가 “소형크레인도 노동자...정부는 노조 눈치만



이 보도참고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박정규 사무관(☎ 044-201-3542)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